

전남대학교와 광주교대의 통합 필요성

교육의향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과대학 사범대가 있다. 전남대 사범대는 중등학교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대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똑같이 4년제 교육과정이다. 전남대 사범대와 광주교육대는 학과의 성격과 숫자, 교수 숫자, 학생 숫자 등 외형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전남대와 광주교대의 통합은 교육적으로나 대학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교육대가 추구하는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사범대가 추구하는 중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성격에서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물론 다른 점이 많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 대학의 공통점도 고려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전남대 사범대에 다른 교육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육대생들을 기존의 단과대학 체계가 아니라 종합 대학 체계 속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양 대학 캠퍼스 부지의 활용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범대가 전남대 광주 캠퍼스의 14개 대학 중 하나로 존재하듯이 교육대도 전남대의 한 개 단과대학으로 존재하고, 그 내에서 사범대와 교육대가 함께 교사 양성 대학으로서 특성을 더욱 밀도 있게 살려 나갈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모두 교원 신규 임용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행히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전남대 사범대나 광주교육대에 여전히 우수한 지방생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낙관은 금물이다. 신규 교원 임용 숫자의 감소와 대입 수험생 숫자의 감소라는 두 가지 악재는 양 대학 모두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 문제는 글로컬대학 선정문제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혹은 교육계 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작년에 통합을 선언했다. 필자가 보기에 향후 사범대와 교육대가 같은 캠퍼스에 존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다. 이것이 큰 흐름이라면 나중에 강제로 따르기도는 선제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며 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이 함께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전남대학교 구성원 다수는 오래전부터 양 대학의 통합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취해 온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광주교대가 긍정적 자세로 나오면 양 대학의 통합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 학생들의 사회 진출 등 여러 면에서 조건이 우리 지역 대학들보다 좋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통합하기로 한 전후 과정과 배경에 대해 우리 지역 대학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 대학과 광역자치단체의 원활한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기회에 광주시와 지역사회도 양 대학의 통합 문제에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글로컬대학30 10개를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5년 동안 총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작년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간 통폐합이었다. 거점 국립대학교 중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가 탈락하고, 부산교대와 통합안을 제시한 부산대가 선정된 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정부는 금년과 내년도에 각각 글로컬대학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대학 간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금년 1월 중순에 쓴 칼럼에서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유혹되어 무리한 통폐합 정책을 펼친다든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과 목표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서 탈락한 이유가 교육부의 무리한 통폐합 정책이나 구조조정에 호응하지 않아서였다면 지역민들이 전남대의 충정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칼럼에서 필자는 전남대학교와 광주교대의 통합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우선 전남대에는 교육대학과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시각)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주민이 토네이도로 파손된 가옥을 살피고 있다. 오마하=AP/뉴시스

서석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지정학적 안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는 소식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서방 선진국'이란 말과는 대비되는 용어로,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전통적으로 과거 식민지 혹은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120여 개국이 포함된다. '글로벌 사우스'의 반대 개념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나, 중국·러시아와는 양자택일식 편가르기를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자국 이익에 따라 특정 진영과 선택적 협력을 하는 실리주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탱크, 잠수함, 방어시스템 등 다양

한 군사 장비를 들여와 미국의 반발을 사면서도 미국 기업과 첨단 기술 협력은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천연자원, 노동력, 시장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석유, 철광석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노동력 확보가 쉽다. 많은 인구 덕분에 대규모 소비시장도 존재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무역 등 경제협력은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기술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 도움을 준다.

글로벌 사우스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G7' 등 강대국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과제다. 서방세계의 경제적 도움을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고도화한 한국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는 글로벌 사우스가 매력에 느끼기에 충분한 요소다.

요즘 세계 각국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익이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 신장과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안기 위한 외교정책 수립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說

전남도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 응원한다

시민 호응·자발적 참여 중요해

전남도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축제가 열리는 6개 시·군에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기로 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지킴이는 하루 빨리 바꾸고 개선해야 할 지구촌의 숙제다. 전남의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남도의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성숙한 축제를 즐겨주길 기대한다.

전남에서는 지난 26일 개막해 5월6일까지 이어지는 함평 나비대축제를 시작으로 5월 2~6일 보성 다향대축제, 5월3~6일 완도 장보고 수산물축제, 5월11~15일 담양 대나무축제, 5월17~26일 곡성 세계장미축제, 5월24~26일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 축제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들 축제에서 위생기준을 강화해 합성수지나 스테인레스 재질의 다회용기만을 사용하고, 세척과 살균소독 과정을 거친 후 축제장에 공급하게 된다. 푸드트럭과 시음회, 시식회까지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된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

회용품은 분해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리고 환경에도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나 바다나 강, 논밭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이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10ℓ에 달하는 종이컵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릴 경우 전 지구적 자원의 낭비도 가져온다. 소비자가 스스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또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을 키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규제 등을 복합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가 성공할 수 없다. 시민 개개인이 편리함 대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 개개인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는 환경을 지키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다. 환경위기의 시대, 작은 불편을 감안한 다회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폭언·위협 악성민원인 엄중 대응해야

광주시,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이 매년 2000건에 육박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민원 건수는 1931건으로 폭언·욕설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협·협박도 441건이었고 성희롱은 82건에 달했다.

일선 구청의 악성민원도 압도적으로 많다. 세부적으로 △폭언·욕설의 경우 시 2건, 구 1362건 △위협·협박은 시 2건, 구 439건 △성희롱은 구 82건 △폭행·폭력은 구 8건 △기타 구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신상공개도 위협수위에 있다. 지난해 이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이름과 전 화번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탈락에 대한 항의를 비롯해 반려동물 사육농장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

개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의 악성민원에 대한 엄중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관련 대책을 강화하면서 악성민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제 도입 때 악성민원이 1만 117건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했다. 타 지역에 비해 악성민원에 소극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시도 앞으로는 악성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직 사회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은 포드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된 바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분풀이용도가 아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전화를 받은 사람 뿐 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인 된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민원인 모두가 알아주길 바란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